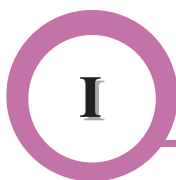


젠더와 입법 포럼



젠더와 입법 포럼

“젠더와 입법 포럼”은 여성·가족 관련 주요 이슈의 정책 방안 및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2년부터 매년 수차례 개최해 오고 있다. 국회, 연구기관, 정부부처, NGO 등 입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성 인지적인 입법안을 만들기 위하여 소통하는 자리이다.

2015년에는 총 3차에 걸쳐 젠더와 입법 포럼이 개최되었다.

2015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간통죄 폐지, 그 의미와 전망

일시: 2015년 4월 29일

주최: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2015년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모색

일시: 2015년 7월 24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

2015년 제3차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사회보장과 젠더

일시: 2015년 12월 18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2015년 4월 29일 “간통죄 폐지, 그 의미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차 포럼을 개최하여 간통죄 폐지가 여성들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망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제2차 포럼은 2015년 7월 24일 정치개혁과 여성대표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3차 포럼은 2015년 12월 18일 “사회보장과 젠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1차 포럼은 「젠더와 입법 BRIEF」 제5호에서 소개한 바 있으며, 이번 호에서는 제2차와 제3차 젠더와 입법 포럼에서의 논의를 소개한다.

2015. 7. 24.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모색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지역구 여성할당 권고조항, 여성추천보조금제 등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왔다. 하지만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전체 의원 수 300명 중 47명에 불과하고, IPU(국제의원연맹) 회원국의 평균인 22.1%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례대표제 비율의 적극적 확대, 지역구 여성공천 할당제 의무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여성후보 전략공천 확대, 여성정치인 인력 풀의 적극 활용이 제안되고 있다.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은 한국여성의정과 함께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의 후원으로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제1주제인 “주요 정당의 정치개혁의 내용과 정치관계법 개정방안”에서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우선하는 정치제도 변경의 윤리가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선거제도 변경과 정당공천 관련 쟁점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우선 ‘선거제도 변경 관련 쟁점’은 인구편차 조정에 대한 접근방식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중복입후보제와 석패율제 도입 논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인구편차 조정에 대한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2:1로 조정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에 대한 기준으로 총의석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1987년을 기준으로 인구대표성 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지역선거구 의석과 비례대표 선거구 의석의 비율로서는 총의석수 상충압력과 지역선거구 축소에 대한 저항을 고려하여 2:1 수준을 제안하였다. 둘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는 총 비례의석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지역주의 완화 효과뿐 아니라 권역대표 기능 역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셋째, 일각에서 지역구와 비례명부에 중복입후보를 허용한다는 전제에서, 중복입후보자 가운데 정당명부 당선자를 결정하는 석패율제 도입이 주장되고 있으나, 현재 이중등록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동의 정도나 지역별로 불균등한

정당경쟁구도로부터 예견되는 불만 등의 요인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정당공천 관련 쟁점’은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경선제) 법제화’로 축약할 수 있는데,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제와 개방형 경선제와 관련하여 현재 필요한 것은 각 정당이 여성후보자 20% 의무할당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와, 개방형 경선을 시행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자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하며 그래야만 양자가 병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각 제도가 충돌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제2주제인 “지역구 30% 여성 의무할당을 위한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은 이유로 여성의 대표성을 실현할 선거법·제도가 지역구 할당제 의무조항 없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정당들이 여성후보 발굴이나 육성 등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점, 여성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아직 우호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여성의 대표성을 실현할 선거법·제도와 관련하여 지역구 30% 할당제 의무조항이 도입되어야 하는 근거로 여성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소 대표되어있기 때문에 불균형한 대표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국구 비례의 경우 여성의원들은 1회에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의원 경력차원에서 지역구 여성 의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여성정치와 관련하여 선진정치국으로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관한 논리 개발 및 공감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 의원의 증가는 국회 상임위 등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증대와 영향력 증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성의원 확대를 통하여 양성평등한 의정활동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2015년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

2015년 7월 24일(금) 오후 1:30~5: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동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

후원 :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

제1주제:

주요 정당의 정치개혁의 내용과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제2주제:

지역구 30% 여성 의무할당을 위한 과제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가나다 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성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민현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계경 (한국여성의정 운영위원, 제17대 국회의원)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2015. 12. 18. 제3차 젠더와 입법 포럼 사회보장과 젠더

현재 우리사회는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장법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를 사회보장 정책에 반영함에 있어 젠더 관점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정책설계 및 집행, 입법 단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Ⅲ)”에서는 도입 당시 젠더 효과를 기대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제도인 「국민연금법」상의 출산크레딧 제도를 심층분석하였다. 더불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구도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과 젠더”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법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주제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에 대한 심층분석”에서는 문헌검토를 통한 전문가 의견 분석과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실현 가능성(합의 용이성과 재정적 용이성 등 고려)과 친여성적 효과 등을 기준으로 단기와 중장기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 개선방안으로는 출산크레딧의 첫째 자녀까지로의 확대, 양육크레딧 추가 도입, 여성 우선 적용으로 ‘기본 설정(default)’ 변경, 그리고 법정 모성휴가기간(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출산크레딧 적용을 제안하였다.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출산크레딧에 필요한 자원 부담에 있어 국가의 부담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안 및 크레딧 적용시점을 연금수급권을 취득 한 때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는 현행방식에서 크레딧 제공요인 발생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2주제인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 입법례 및 시사점”에서는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미국의 시간제 근로 현황과 고용보험제도 및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방식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초단시간 근로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합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의 고용보험 법제도 및 정책은 전일제 고용을 모델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간제 고용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에 대하여 독일,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실업 급여제도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가 고유하게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고용보험DB를 통해 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후에 일·가정 양립 정책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해 일정 부분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015년 제3차 젠더와 입법 포럼 & 사회법 포럼

2015년 12월 18일(금) 오후 2:00~4: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공동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제1주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에 대한 심층분석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
제2주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 입법례 및 시사점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정토론	김영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사무관) 이정화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 김동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무관) 김근주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